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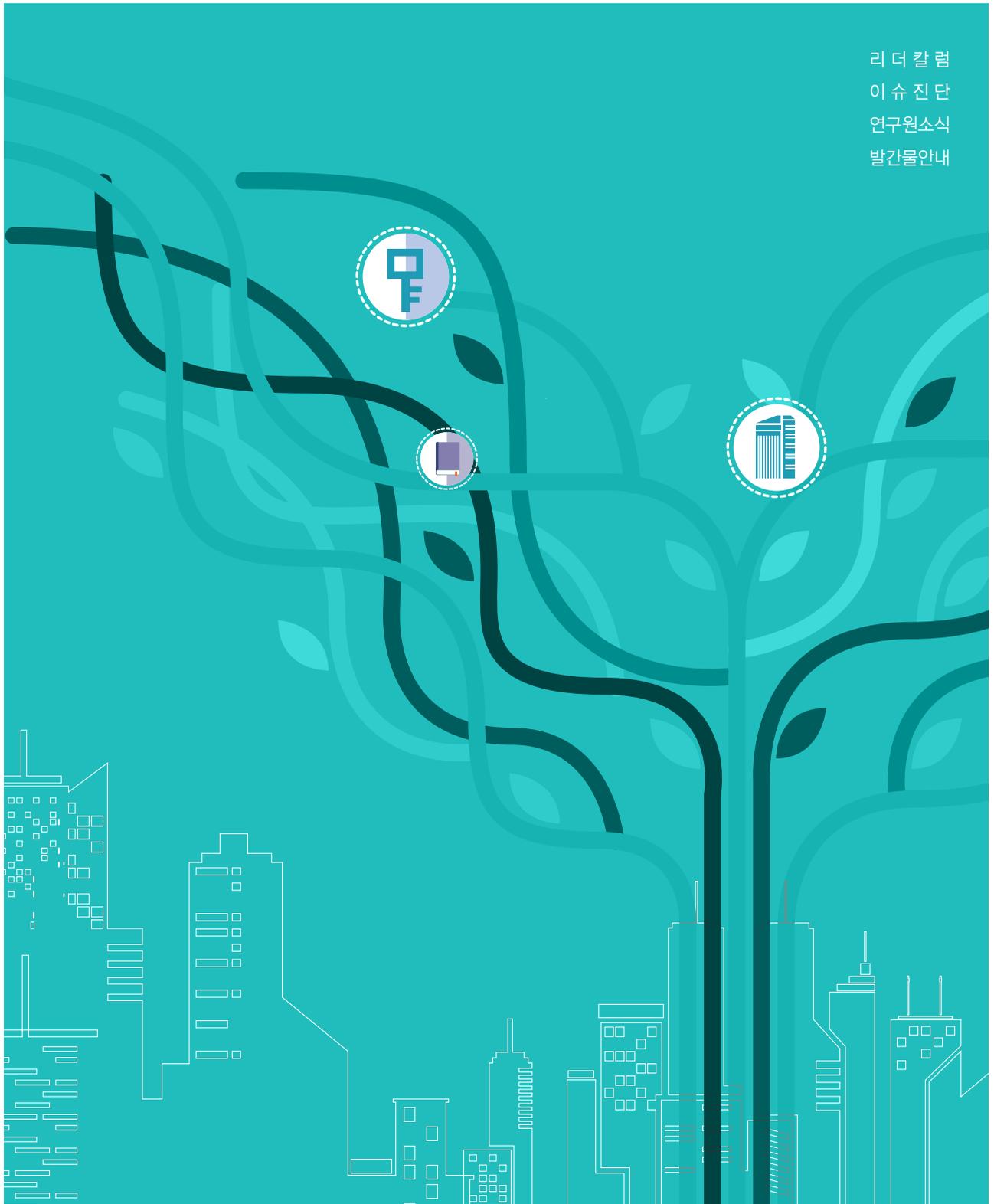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54호 2016년 11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자 라00076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54호) 발행인 신홍균 편집인 서명교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리더 칼럼
이슈 진단
연구원소식
발간물안내





“무신불립(無信不立)”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두 달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어두운 관행들에 대해 서서히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긍정 신호가 엿보인다. 반면 개별적으론 행동 규범적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접촉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혹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청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위반의 잣대에 오르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과제다. 건전한 미풍양속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법의 모호성을 정리하여 시민의 상식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을 취하기보다 장기적이고 더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해 모든 이들이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라는 취지다.

여기서 '신뢰'라는 말은 '믿고(信) 의지한다(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언동에 대해 거짓과 속임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명확한 정보로 인정하고 이를 믿을 때까지 어떤 일도 진척되기 힘들다.

건설업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공사전반에 걸쳐 불협화음이 나고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다.

다행히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옆에 두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대비하여 우리 전문건설사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준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정책연구원을 믿고 의지해야한다. 이 지면을 빌려 정책연구원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건설업 노동력 부족의 대응과제

건설업은 노동력이 다른 산업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활동의 결과인 산출물은 부동산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고, 부동산성(不動性) 때문에 고정된 생산시설을 갖지 못한다.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의 요구대로 생산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입찰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산활동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내 건설시장의 경쟁은 가격경쟁에 의해 이루어진다.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으로 구분된다. 자본은 노동을 제외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망라돼 있다. 단기적인 변동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이 부족하다. 노동을 가변요소로 비용절감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근로자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해지게 된다. 단기 계약직 형태의 근로자로 노동을 제공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고용의 불안정은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생계의 원천이 되는 근로자에게는 큰 위협이다. 건설근로자는 경력과 숙련도 등과는 무관하게 실업을 경험할 수 있다. 생산활동이 어려운 계절적인 요인 때문이다.

건설업에서 노동력 부족의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고용 불안정에 더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골조공사 등 근력을 요하는 특정 공종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현장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근로자 부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생산요소로서 노동력, 직업인으로서 건설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과 함께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더 많은 소득 확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5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근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는 보완재로서 역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력이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대체할 수는 없다. 내국인 근로자 확보방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외국인력은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모색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그리고 노동의 사용자가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정책,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인프라 투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모든 경제적 이슈보다 파급력이 크다. 공약의 내용을 보면 향후 10년간 1조달러(원화 약 1170조원)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을 신규 및 노후 인프라 등 공공 인프라 부문에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른 공약보다 우선한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10일 대통령 수락연설에서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취임 100일 과제'에 포함하였다. 둘째, 재원마련 부분에서 세금 우대를 통한 민간 투자와 민관 협력을 통해 재원, 소위 미국의 인프라 투자 펀드 등을 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른 부분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 경제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로 인한 미국 경제의 성장이 기존의 성장률 추세보다 가파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하면 2017년 성장률은 2.2%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2015년 GDP성장률이 1.5%대를 기록했던 것을 생각하면,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로 볼 수 있다. 당연히 미국 내 반응은 긍정적이며, 이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1건, 11조 2,611억 원을 정점으로 2014년 현재 14건 2조 5,501억 원으로 급격히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이유는 예측가능한 현금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비교적 사업기간이 길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부분도 투자의 이유가 된다. 위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정부의 정책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잦은 정책변경이 투자를 꺼리게하고, 결국 인프라 투자를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현재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성장규모를 고려하면, 공공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 인프라투자가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제시한 정책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나온 정책 외에도 민간 투자에 대한 정책적인 수단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프라는 장기투자이고, 이에 맞는 최소한 또는 적절한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건설관리학회 정기학술 발표대회 전문건설 섹션 공동 개최

- 우리 연구원은 지난 11월 11일, 인하대학교 60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정기학술 발표대회에서 4번째 트랙의 세 번째 섹션인 “첨단건설기술 및 관리 - 전문건설 섹션”을 공동 개최하였다.
- 동 섹션에서는 먼저 우리 연구원의 박선구 책임연구원이 “전문건설업 경쟁력 요소 평가 및 시사점”을, 이어 전문건설업계 대표로 영신디앤씨의 최평호 이사가 “토공현장의 Smart Construction”이란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섹션의 전체 좌장은 우리 연구원의 홍성호 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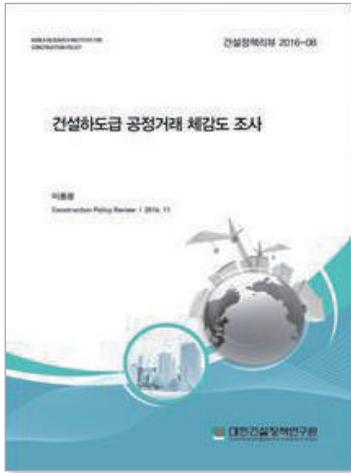
현장 애로사항 수렴 및 직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우리 연구원은 11월 24일, 현장 애로사항 수렴 및 직접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 시·도회 사무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부산광역시회, 충북도회, 전남도회 등 전국 13개 시·도회 사무처장과 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서 우리 연구원은 그간의 성과 및 발전계획에 관한 브리핑과 더불어 내년도에 개최할 예정인 “전국 시·도회 순회 설명회”에 대해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 이어진 현장실태와 애로사항 청취 시간에는 각 지역의 생생한 현장 애로사안에 대한 자유발언과 함께 업역 갈등해소와 건설 산업체계 개선, 인력수급 문제, 계약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해결에 대한 요청사항이 쏟아졌다.
- 이 자리에서 서명교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계와의 직접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현장의 소리가 연구원의 내년도 현안과제 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 사정에 적합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본 보고서는 이번 정부가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시행한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부당특약 등의 제도가 일선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는 5개 범주(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에 속하는 31개 항목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31개 전체 항목에 대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70점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5개 범주별 점수를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서로 보자면, 부당특약 61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6점, 부당감액 77점, 부당한 위탁취소 79점, 부당반품 83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 세부 항목별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6점)’, ‘민원처리·산업재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7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59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당특약(59점)’,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60점)’ 등의 순서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는 건설하도급 제도를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로 하도급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를 점수로 전환하여 제도 간 비교·평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